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할까

野 “또 다시 코드 인사” 반발

행정수도특별법 등 ‘코드 판결’ 공방 예상 정치권 과도한 공세·흠집내기 역풍 불 수도

헌법재판소장으로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지명된데 대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에서는 ‘코드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어 다음달 초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청문회는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17회)라는 점에서 ‘코드 지명’ 및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황우여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이날 “개인적으로 전효숙 재판관을 잘 알지만 중량감, 코드 인사 논란 등을 볼 때 헌법재판소장으로는 부적절한 것 같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유기준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장까지 코드로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청와대의 인사 행태는 명백한 ‘알 박기’”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부처는 물론 대법원장까지 자신의 코드로 맞는 인사를 단행하더니 헌재소장까지 코드 인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전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이후 각종 헌법적 분쟁에서 참여정부와 ‘코드’가 맞는 결정을 일부 내렸다는 점이 ‘정치 공방’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우선 전 후보자는 노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한 국회 발언이 문제된 2003년 헌법소원 사건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인 사전준비행위 또는 정치적 제언의 성격에 불과하다”며 각하 의견을 낸 바 있다.

또한 실행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이 났을 때도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냈다.

이밖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위한 여부 결정에서 7대 2로 합헌 결정이 날 때 위헌 의견을 냈고 9급 공무원시험 응시 인원을 만 28세로 제한한 임용시험령 위헌 사

건에서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는 등 개혁적 견해를 많이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전 후보자의 판결이 정치 공방의 대상이 되겠지만 임명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오히려 전 후보자가 여성 헌재소장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정치권의 과도한 흠집내기 및 정치공세는 역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현재 재판관이 된 뒤에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나 참여정부의 정책노선과 궤를 같이 하는 의견을 많이 냈지만 헌법적 견해에 대한 과도한 공세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견해다.

특히 전 후보자는 재판관 지명 이전에 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검찰의 무리한 구속 수사로 남편이 자살하는 등 가정 파탄을 겪은 여성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제임은 총 소액주주들이 부실 경영진을 상대로 낸 4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실 경영진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여성과 소수자 보호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산문제도 검증 대상이 될 개연성은 있지만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작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전 후보자는 올해 초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14억7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임명 절차=헌법재판소법과 인사청문회법에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재판관 임명·지명에 앞서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국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4기 현재의 출범 예정일인 다음달 15일 이전에 현재 소장 후보자 임명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등을 검증한 뒤 본회의를 열어 재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임명 동의안을 가결시킨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신상 명세

구분	내역
본인	예금 3억9천976만원, 자동차 2004년식 SM3
	배우자 이희태(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4억6천450만원, 자동차 1998년식 코란도, 예금 5억1천121만원
	장남 예금 5천325만원
	장녀 예금 4천326만원
재산	계 14억 7천899만원
	해군법무관
병역	장남 공군 안기제대
	순천, 순천여고, 이화여대 법학과, 이화여대 법학대학원, 17회 사법시험합격,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리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형사2부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생가에서 전 재판관의 6촌 오빠 전효주씨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순천=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마을 생김이래 최대 경사”

■전효숙후보자 고향 표정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16일, 전 후보자의 고향인 순천시 서면 입석리는 금세 흥분에 휩싸였다. 마을 주민들은 “아직 청문회라는 인준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마을이 생김이래 최대의 경사다. 전 후보자가 청문회도 잘 통과할 것으로 본다”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전 후보자의 6촌 오빠이자 이 마을 이장인 전효주(60)씨는 “오늘날 동생의 영광이 있기까지는 모친의 지극정성이 컸다”고 회상했다. 전 후보자의 학창 시절, 전 후보자의 어머니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우물을 길었다고 한다. 맑은 물로 전 지명자의 아침과 도시락을 지어,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어머니의 노고를 잊지 않은 전 후보자는 사시에 합격한 후 홀몸이 된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고 갔으며, 돌아갈때까지 함께 살았다. 오빠가 다섯 명이나 있는 전 지명자이지만, 어머니만큼은 자신이 모시겠다고 고집을 피운 것. 전 후보자의 어머니는 지난해 딸의 품에서 눈을 감았다.

마을 주민들은 한결같이 전 후보자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한번 가르쳐 준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신동’”이라고 했다. 전기가 없던 시

절 초롱불을 켜놓고 날 새기로 공부하다 어머니에게 혼나기도 일수였다고, 전효주씨는 “동생을 유심히 보면 허리가 약간 굽었는데 책상이 너무 오래 앉아 있다 보니 그리 됐다”고 설명했다.

전 후보자의 사촌 형부인 강학령(76)씨는 “처제가 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하며 받은 장학금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사회단체에 기부했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의 모교인 순천여고 역시 “축제” 분위기였다. 특히 순천여고 교사들은 전 후보자가 지난 2000년 특허법원 부장판사 시절, 모교를 찾아 후배들에게 특강을 하는 등 후학들을 챙기는 자상한 선배였다고 전했다.

전 후보자와 같은 반 친구였던 김중숙 곡성교육청 교육과장은 “전 후보자는 부장판사로 진급했을 때도 학창시절의 순수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면서 “‘정령’과 ‘대쪽’이라는 단어는 그녀를 위해 생긴 단어일 것”이라고 친구자랑을 늘어놓았다.

전 후보자는 지난 1951년 당시 승주군이었던 서면 입석리에서 5남1녀 중 막내로 태어나, 서면 통산초등학교·순천여중·순천여고(18회)를 졸업했다. 이대 법대에 진학하고서는 홀로 서울에 올라가 법학도의 꿈을 키웠으며, 순천에는 현재 둘째·셋째 오빠 등 친척 4~5명이 살고 있다. /순천=김진숙·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주민들 “1등 농친적 없는 신동” 모교 순천여고도 축제 분위기

“한미연합사 대체 공동기구 설치”

당정, 전시 작통권 환수 추진 4대원칙 확정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전시 작통권 환수와 관련해 한미연합사대체 공동기구 설치의 유지, 주한미군의 지속주둔 및 미 증원군 파견의 보장, 미국의 정보자산 지원 지속, 한반도 전쟁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유지 등의 4대원칙 아래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또 작통권 환수이전에 현행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면서도 한미 군사협조를 위한 공동기구 설치가 담보돼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 했다. 당정은 이날 김한길 원내대표와 윤광웅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노승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말했다.

노 부대표는 “공동기구 설치는 미일 군사동맹보다 강화된 협력체제가 될 것이라는 의미”라며 “현재 미측과 이 문제를 협의중인데 9월말 구체적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노 부대표는 작통권 환수와 관련한 4대

원칙에 대해 “전쟁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계속 유지는 한미간 공동연습과 훈련, 공동위기관리, 공동군사계획 작성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라며 “정부는 4대 원칙이 전제돼야 작통권 환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며, 미측도 반대는 없는데 부분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측은 특히 작통권 환수시기와 관련해, “미국측은 현재 한국군의 군사능력을 감안해 2009년에도 환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2012년을 적절 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 점검해서 환수시기를 신중하게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정은 작통권 환수시기의 경우 한미간 협의 하에 결정하되 목표연도 2년 전부터 매년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해서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노 부대표는 덧붙였다.



16일 오전 국회기자실에서 이효선 광명시장 사퇴촉구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호남인 폄하 발언을 한 이효선 광명시장 퇴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남향우 1만명 “이시장 사퇴하라”

오늘 광명서 망언 규탄 결기대회

17일 오후 광명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이효선 광명시장 호남인 모독 망언 규탄 국민 결기대회’에 전국 호남향우회 등 1만여명이 모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날 결기대회에는 이효선 광명시장의 직접 참석, 호남비하 발언에 대해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대회 진행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효선 광명시장 사퇴촉구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6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17일 열리는 결기대회에 광명시 호남향우회원 5천여명을 비롯, 전국 각 시·도 향우회원, 시민단체 회원 등 1만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한 “이날 결기대회에서 이효선 시장 망언규탄 및 국민통합 사발식을 갖는 한

편이 시장의 사퇴 및 한나라당의 공개 사과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결기대회 이후 거리행진을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광명시청 앞에서 1인 시위로 펼칠 방침”이라며 “특히 다음달 1일부터는 범시민 연대기구를 구성, 주민소환 서명운동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국회에서 성명서 배포를 통해 “국민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본적인 윤리와 자질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시장의 안하무인적인 발언은 국민의 상식에 벗어나 시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된다”고 퇴진을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전라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차별받아서 안 된다”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지역감정이 다시는 이 땅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광주전남 이용기능장 1호

기술 12년 경력의 최고실력자 이수재원장 직접시술관리

가발

심는가발 탄생!!

대신남녀 프랑코 가발맞춤

농기계는 구입처를 잘 선택하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신선농기계, 유진농기계, 유진농기계, 유진농기계, 유진농기계

산아상리

(062) 363-4800